

제422회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26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남궁빈 외 50,0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5)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7)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712)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5)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6)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7)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0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5)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0)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6)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9)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4)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3)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0)

22. 업무보고

- 가. 교육부 소관
 - 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관
 - 다. 동북아역사재단 소관
 - 라.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3
1.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남궁빈 외 50,0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3)	3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5)	3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6)	3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3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9)	3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1)	3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7)	3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2)	3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5)	3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6)	3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2)	3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7)	3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7)	3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5)	3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0)	3
1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6)	3
1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9)	3
1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4)	3
1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3)	3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4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0)	4
22. 업무보고	7
가. 교육부 소관	
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관	

- 다. 동북아역사재단 소관
 - 라.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법률안, 청원을 상정하고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9항부터 21항까지 13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59조 단서 조항에 따라 이들 의안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남궁빈 외 50,0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3)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5)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6)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9)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1)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7)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2)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5)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6)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2)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7)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7)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5)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0)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6)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9)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4)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3)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0)

(10시11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1항부터 21항까지 20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의사일정 21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하늘이법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에는 교육공무원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등으로 휴직 또는 복직을 할 경우에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 학교장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해 등 시급한 순간 긴급분리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중대한 경우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입니다.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바꾸면서 제대로 열도록 했습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휴직, 복직 후 정상적 가능 여부, 긴급분리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참담하고 안타까운 하늘이 사건에서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조기 복직 할 때 교육 당국이 현행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었으면 어땠을까, 복직 후 동료 교사 폭행 등 징후가 있었을 때 당국이 긴급분리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개정안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취지설명서 및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대체토론……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대체토론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중에 법안 상정과 함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는 지난 18일 교육부와 국교위를 상대로 질의를 하였고 오늘 진행하는 3개 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사편찬위원회는 이 세 기관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는, 아마 관례 없이 따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정 조정을 하면서 민주당에 왜 이 세 기관만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가 하고 질의를 계속 했는데 저희로서는 납득 가능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기관은 지난 국정감사에도 충분히 질의를 하였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이 있어서 질의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속 일정과 업무보고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모습은 좀 지양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필요하면, 납득할 수 있으면 저희 국민의힘도 참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 위원 전원이 지금 다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은 거의 안 오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민주당 위원은 참석도 안 하시고 저희 위원 6명은 전원 참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위원장 김영호 평상시는 민주당의 참석률이 더 높습니다. 오늘만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 지금 골탕 먹이시려고 회의를 소집하신 건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 주세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두 번째로 대체토론은 김문수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과 관련해서 또 저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과 교육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하늘이법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서 제2의 하늘이, 제3의 하늘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법안을 포함해서 조속히 법안소위를, 이번에는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문수 의원님 법안을 제가 살펴봤는데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게 언론에 나왔을 때 이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학생과 학부모가 들어가 있다라는 언론이 있었는데 오늘 법안을 보니까 의료 전문가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만 돼 있고 필요하면 이해관계자, 그래서 저희는 이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 이해관계자라고 교사가 복직하는지의 여부에 미성년자인 학생까지 입장을 듣는 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서 교육위가 하늘이가 역을하게 떠난 것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자라는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말씀처럼 의사일정 관련돼서는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조정훈 간사의 이야기가 일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관례를 따져 봤을 때 이것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통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 양에 따라서 나눠서 받기도 하고 합쳐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부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한꺼번에 받지 않았었습니까? 저희가 조율할 때 나중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이 3개의 역사기관과 함께 받겠다라고 한 것을 국민의힘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한 거고, 교육부와 함께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오늘 이 3개 역사기관이 별도로 된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3·1절입니다. 그리고 군인을 통한 내란이 현실로 발발이 됐고 지금 현법재판소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최후 변론까지 마친 상황에서 우리가 역사기관들이 얼마만큼 역사의식을 이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지 잘 진행하고 있는지 보존하고 있는지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별도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교육부하고 함께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간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늘이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당론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를 했지만 저희 당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논의해서 정말 교사도 위하고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아주 적절한 법을 만들도록 저희 간사들끼리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두 간사님들, 두 분 말씀 다 서로가 존중하시는 것이지요?

○문정복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질의할 위원님 또 계세요?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2항부터 21항까지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장님, 김대식 위원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22. 업무보고

- 가. 교육부 소관
- 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관
- 다. 동북아역사재단 소관
- 라.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10시21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2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그동안 저희 한국학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한 기획처장입니다.

그다음에 장신 출판문화부장입니다.

(인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78년 설립 이후 한국 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한 한국학의 진흥이라는 소임을 맡아 연구와 교육, 국제 교류를 통한 한국학 확산, 한국학 자료의 정 보화 등 다양한 학술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분야의 기초 및 심화 연구, 신집현전 사업, 장서각 소장 고 전 자료의 현대화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서각에 소장된 조선왕실의 고전 자료 정리와 출판, 민간에서 수집된 고문서의 탈초·역주 및 출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연구자와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한국학의 발전을 이끌 차세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31개국에서 외국인 학생 101명을 포함해서 20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및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해외 주요 대학에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연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학술 연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과 활발하게 교류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통해 외국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관련된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각 지역의 향토문화를 정리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을 추진하여 그동안 116개 기초단체와 편찬을 완료하였고 현재 7개 지역의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수정·증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학술 연구자료 및 관련 연구 성과 등을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한국학자료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국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해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 등 해외한국학사업, K학술 확산 연구소사업 등 국내 한국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도움을 받아서 향후 연구원 업무 수행에 귀중한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 1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2025년도 주요 사업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독도주권 수호, 해양 연구 및 독도체험관 운영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국제 학술교류·협력과 교육·홍보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중국의 역사 왜곡 대응입니다.

중국은 역사교과서뿐만 아니라 백두산을 포함한 조선족의 역사 및 유무형 문화유산까지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우리 고대사 관련 연구는 물론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대응 관련 연구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우리 문화 왜곡된 관련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입니다.

사도 광산,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일본은 국제사회에 역사 현안 관련 왜곡된 주장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일본의 한국 지배정책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연구 사업—일제 침탈사 사업입니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응 등 현안 연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입니다.

오는 4월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이 재개관될 예정이므로 일본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 및 관련 단체 등 행동에 주목하여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독도 관련 인문·사회과학 자료의 집적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독도 아카이브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 강화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포럼을 정례화하고 해외 연구기관, 특히 유럽 학계와 함께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사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등 우리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학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협력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교육·홍보 및 교류·협력 지원입니다.

그동안 축적한 연구 성과를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여 히스토리 앱글 및 동북아 줌인 등 역사 전용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국내외에 홍보하고 독도체험관 디지털 전시실을 구축하는 등 전시 환경을 개선하여 독도 교육 강화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공동연구의 확대와 정책 기능 강화,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확산, 적극적인 국제 교류와 연대 활성화를 통해서 미래세대의 바른 역사 인식을 이끄는 역사 연구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위원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안녕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역사와 국민들의 역사 인식 고양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 교육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25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창립 이후 한국사 관련 자료를 수집·편찬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심화·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사 보급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보고자료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새로운 역사 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역사 자료를 토대로 총 112종 1849책에 달하는 각종 자료집을 간행하였습니다.

2025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자료 조사·수집·보존 업무입니다.

보고자료 11~13쪽입니다.

국내 사료 수집 사업에서는 고서, 고문서 및 근현대 지역사 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주 최부자택 자료 등 지역에 있는 중요 자료를, 자료를 발굴하여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사학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구술 자료도 수집할 예정입니다.

국외 사료 수집 사업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등지의 문서보관서에 소장된 한

국사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정리 작업을 거쳐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구기관인 우드로 월슨 센터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협정을 맺어 국외 사료 조사 수집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사 자료의 연구·편찬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4~17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의 편찬·간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한국사료총서 노철일기’와 ‘한국사료총서 국역서 심원권 일기’ 등을 간행하여 주요 역사 자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기초 역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홍문관지’ 등 조선시대 법령 자료 데이터베이스, 국내외 항일운동 자료 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 헌정사 중 제8~9차 헌법개정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각 시대별 기초 사료를 더욱 풍부하게 웹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대별 역사 자료 외에도 역사 교육용 한국사 콘텐츠 구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역사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영상 문화 예술 이야기’ 동영상 등의 신규 콘텐츠를 구축합니다.

이 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역사 정보와 지리 정보를 연계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955~1975년 시기 행정구역 지리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국내외 역사학 학술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8~19쪽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한국사 학술회의는 2회 개최합니다. 5월에 ‘한국 근대 개혁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주제로, 8월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사의 시선으로 본 국권회복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립니다.

국외에서는 중국 흑룡강성사회과학원,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일본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일본 도시샤대학 코리아연구센터 등과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사 이해 증진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20~21쪽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4년부터 연 4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욱 참신하고 품격 있는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한문 및 일본어 초서로 작성된 사료를 익히는 연수 과정과 공무원·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우리역사바로알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시 찾은 빛, 광복을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면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

국사의 보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시작해도 되겠지요?

첫 번째 순서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장관님께 AIDT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개월 동안 수백 번도 더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과서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내놓고 있는 예산 그리고 AIDT 선정률 이것도 다 거짓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 하나 명확하게 진실되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는 없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뭘 말하는지.

우리가 예산편성 지금까지 수차 얘기 많이 했었는데 보통은 AIDT 구독료라고 하면 1년 단위로 편성하는 걸로 생각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고민정 위원 그리고 입조처에서도 AIDT의 예상 구독료를 해서 그것에 곱하기 사람 수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든다 이런 자료가 나와서 저희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한 바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가 AIDT 구독료로 최소 2만 9750원에서 최대 5만 750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2만 9750원이라는 이게 연간 구독료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요, 이것 너무 간단해요.

연간 구독료 맞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연간 구독료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실무자 일어나 보세요.

잠깐 멈춰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시간 멈춰 주십시오.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입니다.

○고민정 위원 2만 9750원 연간 구독료입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저게 이제……

○고민정 위원 연간 구독료예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아닙니다. 6개월입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지요?

않으세요.

아닙니다. 2만 9750원, 최소 가격이라고 말씀하신 이 가격이 연간 구독료가 아니라고

요. 한 학기 구독료지요. 물론 과목마다 혹은 학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라고 말한이 금액을 사람들은 연간 구독료라고 생각하고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곱하기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초등학교 3·4학년 수학 또 고등학교 수학·영어 과목은 학기당 구독료에 해당이 됩니다. 즉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장관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무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2만 9750원에서 5만 7500원까지 이 금액에다가 클라우드 비용 추가로 더 들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앉으세요.

지금까지 예산 책정, 도대체 저희 뭘로 본 겁니까? 교육부에서 주장하신 그 금액이 연간 구독료도 아니었고,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금액이었고 거기에다가 클라우드 비용도 또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클라우드 비용 학생 1인당 1만 원 수준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실무자 다시 일어나 보세요.

지금 1만 원 수준으로 논의 중인 것 맞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1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안내가 되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1만 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예.

○고민정 위원 이 1만 원은 한 학기입니까, 1년입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1년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 클라우드 비용은, 저희가 인터넷 많이 사용들 하시지만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클라우드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정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예?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사용에 따라서 추후 정산을 해야 되는 특수성은 있기는 하나 그렇게 했었을 때 너무나 복잡해지고 해서 이번에 정액 1만 원으로 가격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첫 시작은 1만 원인데, 이것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학년도 들어날 것이고 연수도 들어날 것이고. 그러면 데이터 들어나는 건 불가피한 것 아니에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일단은……

○고민정 위원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됩니까?

앉으세요.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산한 가격 보세요. 2만 9700원에서 가장 최소 가격으로 제가 계산해 놓은 겁니다. 클릭해 보시면,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2학기까지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 클라우드 비용 1만 원 다 추가했습니다. 정보 과목은 5000원만 듣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해서 합계 나온 금액이 저렇습니다. 총 18만 9000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기존에 교육청에서 3만 7500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클라우드 비용도 없었고 저게 연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비용 대비해서 68% 정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요, ‘예산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교육부는 발표한 것 자체도 거짓이에요. 할 거였으면 연간 구독료가 아니라는 설명 정도는 덧붙이셨어야지요.

그다음, 뿐만 아닙니다. AIDT 선정률 이것도 거짓입니다. 보여 주세요.

서울이 24% 선정했다고 하고 대구가 98%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맞지요? 제가 2월 17일 기준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4학년에 세 과목이기 때문에 2학기까지 다 하면 8개를 선정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5개를 선정해야 되고. 그러면 한 학교당 한 과목만 선정해도 이 선정 동의율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실무자가 좀……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들어갑니다.

○**고민정 위원** 들어가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예.

○**고민정 위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대구에 98%라는 것도 모든 과목들을 다 선정한, 즉 교육부가 애초에 주장했던 그 선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과목을 선정해도, 다섯 과목을 선정해도, 두 과목을 선정해도 다 이 선정 동의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한 과목인지 세 과목인지 다섯 과목인지 교육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지금 NEIS에 입력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율 선정의 기조에 따라서 AIDT를 사용하겠다는……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배포를 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교육부가 강제로 교과서 선정하려다가 자율 선정으로 바뀌었지요? 장관님, 학운위에서 선정했다가 다시 취소한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있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예.

○**고민정 위원** 얼마나 됩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그 비율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왜 파악하지 않으셨어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저희가 처음부터 선정한 학교를 파악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자율 선정 이후에 선정한 학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민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관님,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몰랐던 사항…… 여야 위원님들도,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선정 비율에 대해서도 아마 처음 들은 위원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몰랐다라면 국민들은 정말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고민정 위원님의 오늘 주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다 하는 것은 아마 실무자 답변 들어 보면 전혀 아니고요. 그렇지만 설명이 좀 불충

분하게 됐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때 좀 더 상세한 정보까지 해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지적 안 했으면 계속 모르고 갔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곧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이미 다 지정이 됐는데 지금에서야 이 비용 문제를 말씀하면 지금 선택했던 학부모님들이나 미래의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비용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김영호** 아니, 의도적으로 거짓말 안 해도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자들이 볼 때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사기당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실무 차원에서……

○**위원장 김영호** 아니, 실무 차원이…… 국회의원들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다 압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실무자 잠깐 좀 더 설명……

죄송합니다. 보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됐어요. 됐고요.

하여튼 저희가 계속 책임을 추궁할 테니까 앉아 계십시오. 이런 것 저희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앉으세요.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생성형 AI 역사 왜곡 문제 심각한 것 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김대식 위원** 이것 도대체 우리 정부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누구 소관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글쎄요, 사실 생성형 AI의 발전이 너무 급속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금 굉장히 급하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토론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사 관련 공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은 월슨센터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역사 왜곡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미 태스크포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를 이용해서 우리 재단의 모든 자료와, 저희 재단만이 아니고 역사

전반의 자료를 다국어로, 외국어로 번역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위낙 새로운 분야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구조와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여기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이 역사학자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교수로 계시다가, 이게 이론만 가지고 하고 계시다가…… 직접 현장에서, 필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장관님, 제가 아무래도 이것을 조금 질문해야 될 것 같아서…… 교육부가 2022년도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 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부터 27년의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이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이것 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대학들 입장에서 혁신을 유도하는데 지나치게 너무나 많은 평가지표나 또 번거로운 그런 것들을 좀 단순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조조정이나 혁신에 방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이게 재정전전성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교육성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였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뛰어 본 사람으로서 정량 성과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또 여러 논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인 만큼 저희가 의견을 더 꽂넓게 수렴해서 수정·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윤소영 국장님 오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윤소영 국장이 담당 국장입니다.

○김대식 위원 국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규 참여 대학 21개 대학이 정량 성과평가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러한 것을 하면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21개 대학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만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규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원액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차등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런 대학들은 신규로 참여해서 RISE나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해 드렸고, 그 액수가 처음부터 다른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초기니까 오히려 구조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기에 진입해서 좀 더 군살을 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집중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당장은 이렇게 제한을 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래 취지는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혁신 의지를 꺾고 대학의 기회, 형평성을 꺾으면 대학들이 지금 전부 다 사기 진작 문제도 있고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장관님 생각은,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연구도 하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말씀 주신 24개 대학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은 그 대학들에게 맞는 지원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들이 전혀, 정부가 무관심하고 차별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학교에 맞게끔, 그런 학교들은 또 구조조정이 절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지원을 해서 구조조정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면 그다음 해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소통하고 설명드리고, 그 대학들이 정말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대학으로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여튼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분 총장들을 초청해 가지고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소통의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관련된 역사왜곡,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대응하려고 또 연구를 하고 있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일단은 현재 시진핑 정부 하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대사만, 고구려·발해사만 중국의 역사에 편입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현대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조선족의 역사 전부를 중화민족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아가서 무형문화유산, 다 아시다시피 김치라든가 한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중국의 전통문화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국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동북 3성에서 그것을 아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중국 역사왜곡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또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더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동시에 일본 역사왜곡 중에 아까 사도광산, 군함도 왜곡 관련된 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일본이 10년 전에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1940년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 이런 부분을 알리고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김문수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저희는 사실 그동안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등재되고 나서, 그 전부터 끊임없이 여러 가지 연구총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향보고서를 통해서 그 유관 기관에다 이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알려 주고 있었고 그……

○**김문수 위원** 잠깐만요.

어떤 구체적인 대응을, 실행을 뭘 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저희가 2011년부터, 군함도가 등재가 예상될 시점부터 책을 냈습니다. 몇 권의 연구총서를 냈고 그리고 외교부나 교육부에 끊임없이 동향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학술회의를 통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모의를 해 왔습니다.

○**김문수 위원** 자, 일본에 쫓아가서 항의도 하고 또 유네스코도 쫓아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책 내고 있어 가지고 되겠어요? 왜곡 시정이 되겠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늘 저자세, 심지어는 반한국적 태도, 친일 태도를 여러 가지로 그런 모양새를 너무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나 산하 재단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방금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 그래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고 또 이거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공직자 시험에도 가산점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금까지 아홉 번 시험 출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답이 ‘신군부,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이런 게 민주화운동에 해당된다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국민들 또 공무원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이 공부가 상당히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군함도 관련된 거는 한 번도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편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군함도 문제는 지금 일본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켜서 문제가 된 거고 그런 문제가 이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도 출제가 돼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출제를 하시겠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위원장이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시험문제를 알려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웃음소리)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위원장이 출제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거는 답을 알려 줘서라도 시험문제를 내서, 보너스 점수로라도 다 맞게 해 주고 다른 걸로 변별력을 가져서……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한 번도 시험문제를 안내하고 있다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한 역사의식이 철저하지 않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데 위원장이 출제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내리게 되면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출제의 과정은 그 출제에 들어오시는 출제위원들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험을 내라 마라 하지는 마시고 요령껏 잘하세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런 것도 못 하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통해 외국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관련된 오류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여기에도 ‘군함도’, ‘사도광산’, ‘강제 노역’ 검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제대로 바로잡게 해 주시고.

외국에 교과서가 잘못됐는지를 따져야지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곳에도 이런 내용조차 없는데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앞에 ‘여순사건 반란자’ 빼 줘서, 그걸 빨리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마는 아직도 보면 ‘여순반란’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계엄이라는 항목을 쳐 보면.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총 몇 번 한지 아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몇 번 정도 된 것 같은 기억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문수 위원** 이번 것 포함하면 열한 번이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그렇습니까?

○**김문수 위원** 이번 것 빼면 열 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아홉 번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수정하시고 아직도 ‘여수반란’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잘못된 부분, 우리에 관한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외국 교과서를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향 이사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많은 서적도 만들어 내고 그러는데 한중, 한일 관련된 세미나 같은 것도 해서 압박을 하고 있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국 학자들과 영미권의 학자들을 초대를 해서 이러한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제학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한중, 한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한중 한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의 주장을 확실히 명확하게 펼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개선돼서 그 개선되는 과정에는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도 다 있었는데 관계 개선 이후에도 일본의 역사왜곡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일본 정부도 독도 문제나 유네스코 문제에 대해서 개선된 만큼의 성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노력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불만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또 일본 정부가 그렇게 안정된 정부가 아니라는 점도 아마 감안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는 하여튼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제안한 그런 풀 스토리 그러니까 강제 동원이라든가 징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풀 히스토리를 포함하는 그런 설명을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오늘 오신 세 곳의 역사기관의 이사장님들께서는 투철한 역사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변 국가의 역사왜곡에 절대로 밀리지 마시고 하여튼 잘 극복해 나가셔서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먼저 박지향 동북아 이사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야당 위원님이 우리나라에 계엄이 몇 번 있었느냐고 물어봐서 저도 유사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마샬로(Martial law)가 몇 번 발동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전 위원 그동안 68번 마샬로가 발동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입니다. 사실 분쟁이라고 하는 게 이웃 나라들이 다 다양한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영토 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 분쟁까지 이것은 어느 나라들이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특히 역사 분쟁과 같은 분쟁에 있어서 이기는 방법은 정말 얼마나 구체적이고 좋은 자료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것을 이론화하는가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아

닌가. 각종 회의나 이런 데 가서 시위를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자료를 잘 발굴해 내는 것들이 역사 전쟁에서는 이기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 모두 우리와 역사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예산에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은 국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이사장님께 여쭈는 것은 바른 질문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이 예산이 좀 적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다만 현재 그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독도 대응 예산이라든가 하는 거는 지금 예산안 자체에 이렇게 분산돼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대응, 한일 역사 대응에 대한 예산 플러스 주권에 대한 대응 이런 거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곳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 안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위와 복지위, 양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당에서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학생, 학부모님, 전문가들이 다 참석하셨는데요. 참석하신 교원 선생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 고위험 교원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심리적인 위험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다 고위험 교원으로 만들 가능성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고위험군 교사님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점수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는 좀 경계를 해야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아주 고위험군이 되고 하는 그런식의 체크리스트 또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전 위원 저는 이런 걸 마련할 때 있어서 전문가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당연히 전문가분들이 지금 중심이 돼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고요.

특히 직무적합성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야당 의원님의 법안에서 학생이 빠진 부분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생과 학부모가 들어간, 특히 학생이 들어간 것이 그동안에 교사분들에게 굉장한 교권 침해의 가능성과 스트레스

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교원평가는 말씀대로 능력 중심의 역량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동안의 시행 경험을 성찰하고 보완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평가는 수강생들이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인지능력과 인성에 있어서 충분한 발달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한 언론의 기자가 자신의 경험을 적은 기사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늘봄학교에 학생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에 차 있었는데 실제는 늘봄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보니까 학생들을 다음으로 인계하기 위한 작업이고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더라, 그래서 왜 충분하게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이 다치거나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민전 위원** 사실 맞벌이하는, 특히 직업이 있는 여성들에 있어서 육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결국 아이들을 뻥뻥이를 돌릴 수밖에 없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뻥뻥이를 돌리다 보면 몸이 약한 아이들은 버스 안에서, 학원 차 안에서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늘봄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양적으로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프로그램도 좀 더 충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늘봄 프로그램은 팔구십 %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10%, 20%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고, 결국은 질적인, 프로그램의 질을 계속 높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계속 초대해서 늘봄 프로그램 질 개선에 더욱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현안 문제 그리고 역사 3기관 위원장님들한테 실질적인 2025년에 대한 문제를 주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주로 애정을 갖고 하는 질의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한테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교병원 문제,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위 위원

들도 지금 그런 안을 내놓고 있어요. 국립서울대병원 빼고 나머지 대학병원들 다 이관하자는 쪽인데 저는 계속 반대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단순하게 환자들 치료만이 아니라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과기대학들이 과기부 산하지만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우려는 잘 알고 있고 저희도 일부 좀 우려하는 바가 있지만 복지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부서 차원에서, 정부 내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그게 복지부가 지원하는 것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연구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학병원 교수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육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꾸로 교육부장관님께서 복지부 쪽으로 이관한다면 그것 이상한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지금 의료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고 위원님 주신 그 부분도 또 다른 여러 분들도 같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방안은 그렇게 돼 있지만 계속 폭넓게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아니, 지금 의료 개혁을 하자고 하셔서 의대 정원도 늘리고 막 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파행이 됐고 지금도 복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야기했던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회와 협력해서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하고 또 파트너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김준혁 위원** 하여튼 국립대병원 문제는 저희들이 깊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님들과 잘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나머지는 국사편찬위원장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차분히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된 내용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백범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중국 국적이다. 역사학계에서 증명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좀 곤혹스러우시겠지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저희 위원회에서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집을 낸 것이 세 권짜리로 된 게 있는데 상하이 불란서 조계지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중국의 귀화 여부를 체크하는 항에 ‘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중국에 귀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고맙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애정 어린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료조사위원 운영 이 부분, 저도 예전에 사료조사위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국회의 한 번 하고 지역별 워크숍 두 번 하는데 실질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사료조사위원이 역할할 수 있게, 이게 지역의 향토 사학자들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발굴해야 될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집안에서 나오는 문서들 또 문집들, 예전에는 굉장히 큰 인물들, 학자들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작은 집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료조사위원들이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국외 소재 한국사 자료 정리, 이 부분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기관이 연계해서 하는 이런 내용들은 갖고 있으신가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제가 알고 있는 바로 국외소재문화재 쪽, 그러니까 주한미국 공사관 관련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문서 자료들 그리고 사진 자료들, 미국이나 일본·러시아·중국의 문서보관소에 있는 문서들을 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에모리대학 가서 직접 윤치호 관련된 자료를 다 검토를 했었는데, 물론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여러 유형의 내용들을 차분하게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파리 만국박람회 관련된 논문을 쓰려고 국편에서 프랑스 관련된 자료 번역된 걸 쭉 보고 자료들을 찾고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 지금 데이터베이스 돼 있는 것들을 찾기가 쉽게, 연구자들이 찾기 쉽게 다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 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62회 한국사학술대회 개최하는데 한국 근대 개혁운동의 세계사적 의미 이야기하면서 서구 근대 혁명에 대응한 수동 혁명으로의 연쇄, 여기서 수동이라고 하는 것이 능동의 반대의 어떤 수동이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지금 학술회의는 사실은 제가 취임 전에 기획돼서 그 주제로 연구 주제가 공모됐고……

○김준혁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고 싶은 것은 흑룡강성하고 하려고 하는 항일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주제도 미정이고 또 시기도 미정이고 장소도 하얼빈만 되어 있는데 이게 8월에 한다면 국제학술대회가 흑룡강하고, 중국인들하고 같이 하는 건데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제하고 연구자 섭외는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격년으로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하는 식으로 개최가 돼 왔고요. 그런데 지금 미정으로 된 이유가 그쪽에서 우리와 교섭하던 분이 정년이 돼서 퇴직이 된 상태라서 카운터파트가 아직 저쪽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락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이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문제는 없는 거지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87 헌법 체제는 기본적으로 적대세력 간의 불안정한 타협 체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역사 인식에서부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87 헌법 체제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에 대한 기본적 함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한국근현대사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독립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호국 정신으로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약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초청한 한 강사가 최근 20대의 보수화가 역사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란 분은 보수화된 2030세대는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0대 보수화의 원인으로 이전 정부의 반공교육이 원인이고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층이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민주당의 인식은 뿌리가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4050세대가 중고등학교 때 받아 왔던 역사교육과 2030세대가 중고등학교 때 받아 왔던 역사교육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4050세대가 학교에서 공부한 교과서가 우편향되어 있거나 혹은 심지어 정권을 옹호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많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 쪽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 역사교육의 문제는 학교,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 운동권 세대가 받았던 특별한, 대학에서 학습한 운동권 그룹의 의식화 사상교육을 말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권 그룹의 사상교육 내용을 보면 이승만보다는 김구, 김구보다는 김일성을 영웅시하고 이승만은 반민족·반통일 세력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전쟁을 유도하여 발생했으며 대한민국은 일본제국주의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게 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한국의 자본주의는 천박한 매판 자본주의이며 반노동·반민중·반민족적 자본주의라는 그런 내용의 역사교육을 말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가 그러한 역사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인지, 여전히 운동권 그룹들이 받았던 역사교육 내용이 옳았다고 여기는 것인지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보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2030 청년세대가 보수화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이 있을 텐데 여기 오늘 출석하신 세 분의 기관장분들께서는 학자로서 역사교육의 부재라는 인식에 동의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학중앙연구원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아까 언급하신 민주당 강사의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된 세대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성별·지역 간에 걸쳐서도 깊은 단절이 되고 갈등이 심화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히 2030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지 취업의 상황이 이전보다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져 있고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이랄까 불안감이라는 것이 앞 세대보다 상당히 높아졌던 세대가 아닌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대 간의 문제를 어떤 이념적인 문제로 가르기보다는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넓게 경제·사회적인 문제까지 볼 필요도 있고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넓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감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저는 역사교육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역사교육은 제 생각에는 충실히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우리 주권 수호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는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해석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역사교육에 한해서는 저희 교육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국사편찬위원장께서도 짧게 말씀 주십시오.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대단히 민감한 주제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0대 이전 세대들은 민족을 주어로 역사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40대에서부터 최근까지 민족을 주어로 역사교육들이 주로 시행이 됐는데 이삼십 대들은 사실은 그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바깥세상을 볼 기회도 많았고 그리고 합리주의·실용주의 가치관에 많이 노출되면서 개인으로서 성장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들과 역사를 보는 눈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노정돼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세대들을 어떻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면서 바깥에 나가서 당당한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역사교육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위원** 세 분의 기관장님 말씀에 많은 공감이 있고요. 정치권이 정쟁화를 하더라도 세 분의 기관장님께서 학자 출신이니까 역사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에는 토를 전혀 안 나는데 김용태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출신들의 인사들이 근현대사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그러는데 김구 선생님보다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것은 좀.....

○**김용태 위원** 586 운동권 말씀.....

○**위원장 김영호** 아니, 586세대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좀 과도한.....

○**김준혁 위원** 제가 대표적인 학생운동가 출신인데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훈 위원** 위원의 발언을 그냥.....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님의 개인적인 발언이실 수 있으니까.....

○**김용태 위원**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희가 그것을 뭐..... 다른 말씀 아니지만, 다수의 국민들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조차도 김구 선생님보다 김일성을 찬양했다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님의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정을호 위원** 586도 그러지 않아요, 진짜로.

○**김용태 위원** 제가 아는 586은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건.

○**조정훈 위원** 여기까지 하시지요, 그냥.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과 586 위원님들 많은 소통 좀 해 주세요. 저도 사실 좀 놀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저는 김일성을 찬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유감스럽다는 표현 드리고요.

김낙년 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여기서 원장님 얼굴이 안 보여요.

(영상자료를 보면)

원장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김재호 교수의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가 2016년도 8월 달에 출간된 것 아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낙성대연구소에서 같이 근무할 때 혹시 나온 책인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그때는 이미 전남대에 김재호 교수가 가 있었기 때문에.....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책 읽어 보셨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읽어 봤습니다.

○문정복 위원 문제없던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전문가들의 검토의견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가 아니라 ‘대체로 유해한 한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돼서 회수하는 촌극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수거는 하셨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수거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문정복 위원 일단 팔린 것 수거는 다 못 하셨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문정복 위원 예산은 다시 수거를 하셨어요? 예산도 다시 받으셨어요? 환수하셨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환수는 아직 하지 않았고……

○문정복 위원 환수 못 했어요? 왜 환수 못 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그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출판부장 나오셨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예.

○문정복 위원 출판부장,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출판부장님, 이 책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를 영문으로 발간하자고 할 때 담당이셨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예, 출판위원으로서 참여했고 책 낼 때 출판부장이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그 책 내용 중에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것은 빼고요. 그것은 빼고, ‘1987년에서 1988년 민주화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틀을 깨뜨렸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예, 대체로 보고받았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책을 영문으로 발간해서 외국인들에게까지 홍보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뭐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출판위원회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정복 위원 출판위원회 검토를 거치면 출판부장은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아니면 김낙년 원장님이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책을 내는 데는 출판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면 내게 꽤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출판위원회가 전원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작년에 출판위원회가 열렸을 때 우려 사항도 있겠지만 대체로 일단 영문으로 한국사를 소개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쪽에 더 방점이 주어졌습니다.

○**문정복 위원** 의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민주화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저는 그때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를 알 수 없었던……

○**문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그 심의위원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부적절하니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내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그때는 제가 해외에 파견 중이어서 회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서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봤을 때 그런 의견이 들어 있는 게 있었냐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없습니다.

○**문정복 위원** 없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예.

○**문정복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심의위원들 다 파면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도 단 한 사람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출판심의위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위원님, 제가……

○**문정복 위원** 썩었다는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정복 위원** 김낙년 원장님,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지요, 다 읽어 보셨다고 했으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문정복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그 내용……

○**문정복 위원** 민주화운동이 우리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틀을 깨뜨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그 내용을 읽어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도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제도적……

○**문정복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없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그러니까 고도성장의 제도적 틀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고도성장기의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저임금에 기반한 어떤 그런 성장체제가 민주화운동 이후에 깨졌다 이런……

○**문정복 위원** 그러면 제가 일부 발췌해서 이것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화운동을 펌훼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고도성장기의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저임금에 기반한 축적체제가 와해

됐고……

○**문정복 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지금 괜히 둘러대시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책에 대해서 전혀 검증조차도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국가의 예산으로 만드는 책자가, 더군다나 해외에 내보내는 홍보용 책자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런 발상에 대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고요. 이것은 출판문화부장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고요 출판문화부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을 자격이 없고요.

김낙년 원장님도, 이것 본인이 취임하시고 4개월 뒤에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할 때는 좋았는데 실제 내용 보니까 한국의 정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대오 작성과 함께 김낙년 원장님의 사임과 함께 출판문화부장의 파면도 저는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 말할 가치도 없고요.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님, 2009년의 허동현 위원장님과 2025년의 허동현 위원장님은 같은 분이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맞지요?

2009년에 MBC 100분 토론에서 친일파를 민족을 위한 친일이라고 말씀하신 허동현 원장님은……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2009년 100분 토론에서 친일파를 민족을 위한 친일이라고 얘기하신 허동현 원장님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허동현 위원장님과 생각이 아직도 같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그 민족을 위한 친일이라는 표현은……

○**문정복 위원** 또 하나 묻고 나중에 답하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정복 위원** 2023년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호국 간성의 요람인 육사에 존치된다는 것은 생도 입장에서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허동현 원장님과 지금의 허동현 원장님은 같은 분이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그 신문은, 신문에서 인터뷰를 육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의 역사관은 어떤 거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정복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아니, 그러니까……

○**문정복 위원**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육사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역사 인식은 그렇다라는

얘기였지요.

○**문정복 위원** 궤변하지 마시고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궤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것 취재할 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문정복 위원** 말꼬리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적어도 국사편찬위원장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한 애국지사에 대한 편웨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사실 그때 신문기자가 물어봤을 때 제가 제 의견으로 얘기한 얘기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문정복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그래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간단히 축약해서 말씀 주세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간단히……

사실은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홍범도 장군 때 그때, 자유시사변 때 희생된 많은 무명의 독립운동 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추모의 공간도 없고 추모제도 없고 기념비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추모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사 보도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영호** 정리해 주십시오.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그 문제들을 갖다가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문정복 간사님, 이제 질의는 마치셨지요?

○**문정복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저는 방금 문정복 간사님과 질의 답변했던 김낙년 원장,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의 발언입니다. 문정복 간사님이 얘기한 그 역사 교과서의 내용, ‘박정희 정부 시절의 저임금 구조로 인한 고도성장이 민주화운동 때문에 와해됐다’, 이 ‘와해’라는 표현에는 부정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도 앞당긴 정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를 앞당긴 정당인데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 책 저는 바로 수거하셔서……

정말 민주화와 산업화가 서로 배치된다는 개념을 우리 언론과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쳐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양 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시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답변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깊게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역사관이랑 너무나 다른 얘기를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하시고, 정말 국민들한테 엄청난 질타 받으셨잖아요, 몇 분들은 굉장히 공분을 사셨으면 좀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역사관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뭐 자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부를 대표하는 역사기관의 이사장님 또 원장님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의 출판도 중단했잖아요. 왜 중단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언론 탓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단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게 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학자로서 연구한 이런 것들을 어필하셔야지 그냥 국민들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저는 그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고 좀 가라앉히시고 다시 한번 일단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지금 입시 비리 문제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또 어느 정도 소정의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감사원 주요한 발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현직 교사가 문제를 사설학원에 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돈, 정말 공교육 살리겠다는 교사들이 사교육시장에 문제 팔고 양심 팔아서 번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213억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1인당 평균 8500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하면 그냥 문제 판 게 아니라 학교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이 교사들이 EBS 집필위원이 되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정말 이분들은 교사라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처음부터 교육개혁이 정말 4대 개혁 중의 하나였고 입시의 공정성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 23년 감사원 실태조사도 하고 또 교육부도 자체조사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 앞에 표 하나 보여 주시지요.

지금 교육부가 실태조사한 건데요, 지난 정부입니다. 지난 정부 유은혜 전 장관 시절에 교사들이 겸직허가를 요청했는데 열여섯 군데의 겸직허가 신청을 허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겸직 기관을 보면 아주 내놓고 학원도 있고 내놓고 수능업체도 있고, 저런 연구소 등을 따져 보면 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설 학원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만들기 위한 연구소입니다. 현직 교사를 이런 사설 학원 또는 수능업체 그리고 수능업체에서 유지하는 연구소에 겸직허가를 해 줬다라는 사실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문제를 파악을 하고 지난번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절대 없는 것이……

아까 한국일보 기사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지금 소위 우리 입시에 관심 있는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시대 인재,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에도 현직 교사가 입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재발 방지가 아니라 이건 이런 행위를 한 교사들을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우리 입시가 공정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절대 겸직허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퀄러문항부터 시작해서 이 사교육 카르텔은 출제 선정부터 전 과정을 철저하게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정말 이 뿌리가 어딘지 좀 보고 싶고요. 제가 일부러 정쟁을 하려는 게 아니지만 지난 정부 유은혜 전 장관 시기에 교사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출제하거나 학습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게 가능한지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들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교육부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당시의 규정에 있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정책으로 이렇게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조정훈 위원** 아니, 21년 지난 정부 때 교원 겸직 실태조사했고 이렇게 아까 보여 드린 16건의 문제 거래 행위가 포착됐어요. 중단하시지도 않았고 그냥 겸직 거래를 허가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육부가 교사가 다른 학원이랑 일해서 문제 팔아서 돈 벌겠다는데 그걸 잘한다고 겸직허가를 해 주는 이런…… 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아마 지난 정부의 그 사안이 감사원의 지도 감독 소홀로 그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는 저는 입시 비리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입시 비리로 상징된 공정성의 훼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부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받았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준,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공무원 청탁법 등등에 의하면 이건 명백한 범죄 사실이라고 짐작하는데 이 관련된 교사를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했고요. 또 일부 교원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뉴스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런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 지금 주요…… 아주 다 알고 있는 학원의 퀄리 문제를 사고판 그 거래는 감사원과 따로 조사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차관이 답변……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입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요 교육부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부처 차원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추진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감사원의 감사는 그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추적을 통해서 감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후속적인 조치는 징계, 수사 의뢰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해서 공정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여기 기사 보면 ‘현우진, 정상모’, 저 기사를 읽는 겁니다. ‘이창무 등 일타강사들도 출제진 문제를 사들여’, 이게 사실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 당시에 확인된 사항들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훈 위원** 추가적인 조치가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수사 의뢰부터 시작해서 국세청과 관련돼 있는 국세적인 조치들이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그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저희 교육부에 전달된 사항은 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추가적인 관련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저희가 정치하는 한 제가 교육부, 교육위 간사로 있는 한 이 문제는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하기 전에 교육부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요? 일벌백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어제는 12·3 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결국 지금까지의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 드러난 반헌법적·불법적 계엄 선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실패한

계엄을 포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크게 손상되었고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의 사기 저하, 외교와 안보의 불안정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뒷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가 이를 분명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국가 3대 역사기관장님들이 자리하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기관장님들께 12·3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만 분명하게 포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나머지 두 기관장님은 당시 회피성 답변 내놓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이 역사학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기관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님은 명확한 답변 회피하시면서 외교, 안보, 경제 등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다수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만 답변하셨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12·3 계엄령 선포 절차 및 사유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물론 아닙니다.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 아예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 거부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도 다시 묻겠습니다.

12·3 계엄령 선포 절차 및 사유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위원장으로서는 답변을 이미 드렸고요. 학자……

○**백승아 위원** 답변 거부하셨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아니, 위원장으로서 여쭤본 거니까 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렸어야 했고……

○**백승아 위원** 웃지 마시고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학자로서 얘기를 하자면 물론 계엄에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물어보신 건 위원장으로서, 국편을 대변하는 위원장으로서 물어보셨으니까 그것은 국편의 위원장이 답변드릴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거지요.

○**백승아 위원** 자, 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앞에 두고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불법적 계엄에 대한 기관장님들의 답변, 국민과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어서 독도 수호 연구예산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관련돼서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20년째 독도가 일본 고

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박지향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목적 그리고 재단의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뭡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 수호의 의지를 전 세계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백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은요 독도 문제와 폐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북아의 역사 문제 중에서도 독도 문제에 특별히 관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도 모두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실제로 재단 소개 홈페이지에도 보면 주요 사업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독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수행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랍니다.

이사장님, 2023년도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정확하게 지금 23년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 연속적으로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23년 20억 2800만 원, 24년 14억 3600만 원, 25년 12억 2600만 원이고요. 2년 사이에 윤정권 아래에서 40%가 줄었고요. 24년도 예산은 최초 교육부에서 가져온 것은 5억 3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엄청 엄청 애를 써서 14억 3600으로 늘려 놓은 것입니다.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23년 5억 17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5년도에는 2억 7500으로 2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전체 기관 사업비도 줄었지만 일본 역사왜곡 대응, 독도 주권 수호 연구 예산은 그 감소 폭이 유난히 큽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독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독도 예산이 감액되는 와중에 우리 세 분 기관장님과 함께 여러 역사 기관장들이 독도 답사 경비로 몰래 이 돈을 썼어요.

이사장님, 독도 주권 수호 연구 예산이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비 예산이지 기관장 업무 추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20년째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논리 연구하라고 예산편성했더니 기관장들 답사 비용으로 편법 사용했어요. 이래 가지고 독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 남용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 정말 이사장님이 독도 수호 의지가 있으셨다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독도 연구 예산, 뉴라이트 기관장 데리고 독도 가실 게 아니라 예산 확보 위해서 국회로 교육부로 기재부로 뛰어다니셨어야지요. 왜 독도를 다녀오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제가 답변을……

○**백승아 위원** 아직이요.

절차적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 예산 변경할 때는요 수정한 내용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제출하셨어요? 기관장 답사 예산 기준 계획서에 없던데요. 장관에게 사유서 제출했습니까?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그게 업무추진비로 간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추진비로 가야지! 왜 독도 수호 예산으로 갔냐고요!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업무추진비로 가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 백승아 위원** 답변하세요! 엉뚱한 답변 하지 마시고 교육부에 제출하셨느냐고요, 서류?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역사 관련 유관 기관들의 기관장들을……
- 백승아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게 하십시오.
- 위원장 김영호** 조금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 백승아 위원** 답변하시라고요. 교육부에 제출했느냐고요!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저희 역사 정보……
- 백승아 위원** 됐습니다.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공유 및 협력 관계에서……
- 백승아 위원** 거짓말하지 말고, 됐다고요.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아니요, 거짓말 아닙니다.
- 백승아 위원**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김영호** 진행하시지요. 잠시 멈춰 주시고요.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저희가 제 이사장 때만이 아니고요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 백승아 위원** 저기요, 이사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국회 와서.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교육부장관한테 제출할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자, 우리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하시지, 질의를 자꾸 중복하면 혼란스러우니까요 질의 마치고 위원님에게 그 의향을 여쭤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 백승아 위원** 참, 정말 기가 막히네요. 기관장이 답사비 없는데 답사 갔다 오셨고요. 국가재정법에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요.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 집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녀오셨으니까 국가재정법 위반하신 거예요.
- 이사장님, 동북아재단 사업비 이사장님 쌈짓돈 아닙니다. 하물며 독도 예산 반토막 내놓고 그 예산마저 기관장 답사비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쓰셨고요. 국가재정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두 개 다 위반하셨거든요. 재단 사업비 사용했으니까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 됩니다. 저는 김영호 위원장님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한번 들어나 보겠습니다. 뭐라고 아까 변명을 하신 건가요? 제가 사실 확인하고서 답

변드린 건데요. 예산 내역 다 확인했는데……

○김민전 위원 시간 지났습니다. 시간 지났어요.

○백승아 위원 아니, 내 시간을 저분이 까먹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아니요, 시간 초과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 조금만 좀 자제해 주시고요.

○백승아 위원 저는 국힘당 의원 발언할 때 말 안 하거든요, 질의할 때.

○위원장 김영호 질의 마무리……

○백승아 위원 너무 참견이 심하세요, 항상.

○위원장 김영호 질의 마무리하셨지요?

○백승아 위원 소위 위원한테 소위 열심히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하지를 않나. 정말 예의가 없어요, 정말.

○위원장 김영호 질의 이제 마무리하셨고.

○조정훈 위원 예의요?

○백승아 위원 예!

○조정훈 위원 예의요?

○백승아 위원 예, 예의요!

○조정훈 위원 자, 질의하면서 이렇게 치는 게 예의예요? 학생이에요?

○백승아 위원 제가 간사님께 하지 않았고요.

○정성국 위원 그만합시다!

○조정훈 위원 아직도 학생이에요?

○백승아 위원 저분이 계속하셨어요.

○정성국 위원 그만하세요.

○백승아 위원 예, 그만하세요.

○위원장 김영호 그만하시고요.

최대한 상대 위원님, 여야 위원님들 발언 시간에는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교육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잘해 주셨거든요. 잘해 주셨고, 백승아 위원님이 조금 질의 시간 끝나고도 발언을 했는데 그 시간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만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박지향 이사장님 짧게 답변 주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저희는 영토 주권 수호 유지를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유관 기관장들을 모시고 답사를 다녀옵니다. 저만이 아니고 이전에 이사장님들께서도 그런 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세 기관만이 아니고 6개 기관장들이 역사기관장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기관장들을 모시고 그리고 저희 독도연구소의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토 주권……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했고, 지금 그러면 이게 관행적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이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백승아 위원** 더 문제네요,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런데 백승아 위원님 말씀은 이 관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잘 지켰냐는 말씀인데 그것도 지키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그러니까 울릉도·독도의 학제간 연구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여기서 시시비비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거기에 답사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그 예산에도.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 전체위 열렸을 때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백승아 위원** 저희는 다 조사했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저도 아직 전부 이해를 못 했으니까요.

○**백승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여러 감동적인 장면이 많기는 한데 특히 645년에 당 태종이 침략해 왔을 때 안시성에서 당 군을 격퇴하면서 고구려의 위상을 세웠던 그 기록은 참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확실치는 않은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때 당 태종이 아주 다급하게 도망을 갔다.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혼적들이 나옵니다. 연개소문이 추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추정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고구려의 국력이 당나라에 못지않은, 오히려 당나라를 압도하는 정도의 전력이었다. 굉장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왜곡을 보면 고구려조차도, 발해를 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속국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떠나서 고구려에 대한 역사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지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중국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왜곡은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의 역사왜곡 못지않게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에 있는 교과서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게 중국 교과서거든요.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받은 중국의 역사왜곡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빨간색만 한번 보세요, 복잡하니까. 보시면……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 김일성 찬양 한 적 없다 하는데 저도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미국은 공공연히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침략

했다’, ‘신중국의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지켰다’ 이게 중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것 한번 볼까요? 중국의 중학교에서 배운다는 교과서인데요, ‘미국은 공공연히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침략했다’, 중국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겠습니까? 중국 고등학교 교과서 ‘중외역사강요’라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도 제가 빨간색을 해 놓은 걸 한번 보시면 ‘미국은 안보리 회의를 조작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을 조직해 삼팔선을 넘었다’ 그러면서 또 침략전쟁을 확대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침략전쟁을 확대하며 중국의 국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것 정말……

박지향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역사재단 이사장님으로서 중국의 역사교과서가 이렇게 나오고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분개가 안 됩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물론 분개하고 있고 저희도 끊임없이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언론에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이런 것도 정말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정말 강하게 대응해야 되고요. 특히 삼국시대 때 임나일본부설이라 해 가지고 일본이 신라와 백제를 지배했다는, 광개토대왕비에 있는 그 조문을 어찌 보면 조작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아직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중국의 역사왜곡도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이 자료 받아 보면서, 우리 보좌진들이 이 자료를 저하고 이렇게 의논할 때 이게 중국 교과서가 맞냐고 그랬어요, 정말. 정말 중국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느냐고, 초중고에서 일관되게.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항의 정도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일본에 대한 역사왜곡도 잡아야 되지만 중국의 역사왜곡도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셨겠지만.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면요 발해를 속말말갈, 중국의 봉건 정권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발해는 우리 역사상 북방을 지배했던 마지막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대조영이 세웠던.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라로 삼국통일이 되면서 한반도 이내로 내려왔지만 발해가 고구려의 영토 이상을, 더 큰 영역을 지배했던 말이지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고조선이라든지 부여, 삼한 이런 역사는 아예 그냥 누락을 시켜 버려요.

저는 제가 젊을 때 ‘주몽’이라는 그 드라마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송일국 씨가 주몽이었지요, 그때. 그때 주몽 드라마가 아마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정훈 위원 약간 닮았어요, 주몽이랑.

○정성국 위원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조정훈 위원 위원님이.

○**정성국 위원**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이유는 고대사가 그만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부여의 뿌리에서 고구려가 나왔고 부여의 뿌리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백제로 내려가잖아요, 소서노의 아들인 온조가. 그렇지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예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좀 무관심하게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차관님, 혹시 최근에 학생들이, 부여라든지 삼한에 대한 역사가 교과서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닙니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저희들이 배울 때하고 다르게 지금 많이 축소됐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초중고등학교에서 고대사와 그다음에 중세사,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비중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배우게 되는 고등학교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습니다마는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고대사도 배우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너무 조선시대에만 매몰돼 가지고, 그렇지요? 물론 역사적 기록이 별로 없고 흔적이 없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역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고대사가 축소됐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었거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서, 적정한 비중으로 역사교육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그게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고대사, 특히 삼국시대 이전의 고조선이라든지 부여 이런 역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생략을 해 버리고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방향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교육과정 개정 단계에서 반영이 되는 그런 체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서도 고대사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위원장 김영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전 질의, 두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우선 질의 전에, 아까 김문수 장관의 김구 선생님의 중국 국적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궤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렵게 역사기관장님들이 국회에 오셨으니까 국민들께 명확하게 확정을 지어 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김낙년 위원장님부터……

혹시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입니까? 간략히 그냥 ‘엑스, 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을호 위원 국적이 어디입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한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을호 위원 예.

박지향 이사장님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한국일뿐만 아니고 김구 선생님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정을호 위원 예.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아까 답변드렸는데 한국입니다.

○정을호 위원 맞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에 청찬 한번 해 주고 싶었던 게 하나 딱 있어요, 요 근래에. 강경애 장관, 보훈부장관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그 논란이 있을 때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말을 했더라고요.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다’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 65년, 경술국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협정은 원천 무효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요. 이 부분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일인데 고맙다고 느끼는 저의 심정을 기관장님들이 좀 알 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랬을 때 기관장님들이 각각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김문수 장관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기관에서 대응한 게 있습니까?

김낙년 연구원장님부터……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요.

박지향 이사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기관으로서……

○정을호 위원 혹시 김문수 장관이 이런 발언 했을 때 뭐 대응한 것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저희 재단 차원에서 대응한 건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없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역사기관장님 세 분이 지금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대응을 안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기관장님들이 좀 더 그 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학생과 국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좀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김낙년 원장님, 제가 연구원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봤더니 원장님 인사말로 게시돼 있는데 ‘조선왕조는 개항 후 근대국가의 수립에 실패하여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이게 게시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1월 8일 날 이를 발견하고 이번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허동현 위원장님 계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혹시 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낙년 원장님 표현에 대해서 허동현 위원장님은 ‘일제 침략의 책임을 주권을 강제로 피탈당한 피해국인 한국에 전가할 위험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지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정을호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인사말은 잘못된 역사왜곡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닌데 그렇게……

○정을호 위원 취지가 아닌 게 아니라 인사말에 버젓이 이렇게 써 놓고 취지가 아니라 고 하면 국민들이 다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 취지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제가 공공기관장으로서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지금 모든 기관장님들이 뉴라이트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모든 걸 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면…… 인사말 자체가 얼굴이잖아요. 얼굴에 대놓고 이렇게 써 놓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인사말 보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운영 부문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다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학대학원 있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정을호 위원 있습니다.

경제학과가 2020년부터 지금 교수도 강의도 없이 오랫동안 공백 상태였는데 원장님 취임 후에 갑자기 경제발전론 분야 경제학과 교수 채용한다고 공지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지금 채용 공고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는 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받고 있던 경제학과 인력을 갑자기 충원하자고 하니까 54명 교수님들의 절반이 넘는 32명이 반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원장님과 친분이 있거나 기존 낙성대경제연구소와 관계있는 분들이 채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여 경제학과 교수 채용에 반대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최근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경제학과 채용계획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저희가 오늘 질의하겠다 하니 교육부에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맞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그것뿐만 아니라 원내에서 일부, 그러니까 충분한 동의를 못 얻은 부분이 있어서……

○정을호 위원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인사말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지금 낙성대경제연구소라는 부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설불리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을 전달하고요.

다음에 보시면 연구소에 K학술학산연구소사업이라는 부분 있지요, 원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정을호 위원 봤더니 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던 연구자 34명 중 무려 7명이 전현직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속입니다. 맞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속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속 7명 외에도 외주 형태로 다른 분들이 연구활동비를 받아 간 사실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요.

그리고 박이택 소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혼자서 2720만 원을 받아 갔어요. 그렇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정을호 위원 더 큰 문제는 결과물이라고 나온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부 강의와 단행본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를 옹호하는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어느 검증 없이 다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 계속 ‘예, 예’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렇습니다. 원장님의 만든 강의 자료인데요. ‘식민지 경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일본의 자본수출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건 강의뿐만 아니라 같은 제목의 원장님 발간물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맞지요, 이 부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정을호 위원 이 사실 다시 바꿀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학자로서의 자존심인 거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학자로서는 여러 가지 사실,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을호 위원 됐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혈세를 50억씩이나 지원된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50억씩이나 지원된 사업이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왜곡이라든가 궤변이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학자로서는 저희가 뭐라 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기관장이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지식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런 유사 이슈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 결과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이런 왜곡된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즉각 조치해 주시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의원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김낙년 원장님도 지금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관련해서 아까 개인적인 소신이랑 기관의 운영이라든가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을호 위원 삼일절을 맞이해서 오늘 역사기관장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삼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관 명의로 한번씩 다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낙년 원장님이 낙성대연구소를 한때 이끌었던 분이신데 그 편당은 어디서 받으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위원장 김영호 낙성대연구소의 편당은 어디서 받으세요? 아까도 예산집행을 많이 하시던데 정부로부터도 편당받으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그러니까 낙성대연구소가 직접 받은 건 없고요. 왜냐하면 낙성대연구소는, 보통 정부에서 주는 거는 대학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정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낙성대는 예를 들어서 독지가들이 일부 기금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갖고 운영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항간에는 사실, 일본으로부터도 좀 예산을 받는다는 건 사실이지요?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요 박성준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박성준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위에서 역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현안질의를 한다라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좀 이색적인 것 같아요.

허동현 위원장님이 역사학자시잖아요. 왜 이런 질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역사관이 분명히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우리 전통적인 5000년의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논란이 되고 현안이 되고 있고 삼일절을 맞아서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한 현안질의를 왜 한다고 보세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사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우리 지식사회의 역사관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다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원화된 시민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 인식이 나올 수 있는 정치 환경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쪽만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충돌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최대공약수를 서로 찾아가는 게 시민사회가 갈라지지 않고 좀 더 모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걸 학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박성준 위원 위원장님, 역사, 다양한 시각 그런 얘기하는데 그것은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이지만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과정 이것을 바로잡고 한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바로미터를 제공하는 것이 역사이고 역사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역사관을 볼 때 사실은 맥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민족주의 사관이 있었고 식민사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개발독재 이후에 군사정부 이후에는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민주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 사조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면, 역사관을 바라본 사조가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큰 진행이 와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역사 논쟁을 다시 부추겼지요,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그 인사들의 하나가 쭉 봤더니 뉴라이트에 대한 역사적 시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이 독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경제사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해방공간에서 건국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논쟁들이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홍범도 장군부터 해서 이러한 논쟁들이 더 부추겨졌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뉴라이트 역사관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기관장이 되면서 좀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뉴라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큰 흐름으로 그렇게 잡혔다라고는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라이트(right)라고 할 때, 뉴라이트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면 우파 지형은 민족을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전통적으로 우파 지형은 민족을 지향하지요. 그러면 민족주의적 사고는 원래 우파적 사고를 갖고 있고 국가 중심적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민족 중심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보통 우파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뉴라이트라고 하는 시각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때 오히려 식민사관에 가깝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아니라 그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학자로서의 저의 견해를 여쭤보시는 거지요?

○박성준 위원 예.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저는 뉴라이트가 아닌 것은 알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으신데……

○박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흐름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뉴라이트는 운동권에 가담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세상이 변화한 걸 자각하고 사상적으로 변화하신 분들이에요. 미국의 경우에는 네오콘이 그런 쪽이고 한국은 이영훈 선생님이라든가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바뀐 거지요.

○박성준 위원 저도 맥락은 다 아니까요 그 정도 얘기하시고.

제가 두 분께 좀 드릴게요, 먼저 국사편찬위원장이시니까 국사편찬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거고.

김낙년 중앙연구원장님도 경제사를 오랫동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박성준 위원 그리고 학자시고.

오늘 논의되는 이 책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와는 전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질타를 받고 또 수정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저로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지만……

○박성준 위원 제가 끝나고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한 1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박지향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나요, 그 책이?

그 책이 워낙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교과서포럼이니 이러한 역사 논쟁에 대한 것들을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 움직이면서 또 하나의 큰 맥락으로 한국사회에 등장을 했던 것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라이트라고 하는 경우는, 라이트, 우파는 국가 중심인 거예요. 대한민국 중심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 를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하는 쪽에서의 접근 방법이 기존 세계 역사관을 바라보는 우파적 시각과는 전혀 다른 뉴라이트 시각이 한국에 상존하고 있고 그것이 정권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이 역사학자들이 오히려 미화시키는 논리를 제공하는 쪽에서의 학자의 풍들이 이루어졌다, 학풍이 이루어졌다. 그게 하나의 뉴라이트 기조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역사관이고 역사학자들인데 오히려 역사의 과오를 부추기는 쪽으로 그것을 만들어 낸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내란이 이어지는 그러한 논리적 토대가 된 거예요. 그 역사학자들이 윤석열의 역사관에 대해서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잡았어야 되는 거지요, 홍범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일절을 맞아서 이 역사학자들이 기관장으로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김낙년 원장 책의 내용이 어떻고 어떻고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이 내란과 비상계엄에 큰 오점을 남기는 역사의 오류를 점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뉴라이트 역사관의 사조에 있는 분들이 기본적 토대를 만들었다, 논리적 제공을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누구한테 질의하신 거지요? 세 분 다?

○박성준 위원 두 분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허동현 위원장님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위원장 김영호 김낙년, 박지향 이사장님 답변 주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지금 지적하신 거는 좀 너무 과한 지적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의 경우는 지금 이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 경우는 좀 더 사실에 입각한 실증 학문으로서의 역사관이 뉴라이트에서도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지향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

○박성준 위원 됐습니까?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지향 이사장님은 답변 안 하실래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제가 조금……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일단 순서대로 할게요.

박지향 이사장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저한테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아까 질문하셨어요.

그러시겠어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위원장 김영호 허동현 위원장님.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지금 박성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족주의사학에 근거해서 봤을 때 문제점,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민족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태극기 옆에 성조기가 같이 나온다든가 이상하다, 특수하지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민중을 얘기하는데 앞에 ‘민족’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중주의나 좌파의 사관은 평등과 연대인데 여기에 민족이라는

우파의 수사를 갖고 오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와 기억을 갖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세계의 보편적인 흐름과 같이 갈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 그리고 위원님들도 좀 고민해 주셔서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겪을 혼란을 방지하는 데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시겠지만 역사학자분들이 정말 중심 잡아 주셔야 됩니다.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지금 너무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잘 의식해 주시고요.

이제 오전 질의가 끝났는데 김낙년 원장님, 아까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린다고 그랬는데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안 해도 되고요.

하시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1분 시간 드리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아까 조정훈 위원께서 김재호 교수 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경공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하다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87년 그런 식의 민주화라고 하는 게 그동안 저임금에 기반한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그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고 그다음에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이행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의 고도성장 체제가 와해됐다라는 식의 얘기는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 가지고 오해가 된 것 같고요.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게 경공업, 중공업으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속에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저임금과 노동운동 억압의 형태로 진행됐던 축적체제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전환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맥락 속에서 김재호 교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오해가 된 것 같아서 보충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들어도 이게 그냥 과정이라고 그래도 그건 비판적인 기조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게 아쉽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점심 식사 포함해서 오후 2시 반에 속개할까요? 팬참으시겠습니까, 정성국 위원님, 김민진 위원님? 2시 반, 14시 30분?

○정성국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장관님께 AIDT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AIDT 채택률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지금 6개 교육청에서 건의문 발표한 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봤습니다.

○**고민정 위원** 디지털튜터 사업 또 디지털선도학교 운영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삭감이 아니고요. 디지털튜터나 디지털선도 사업은 많은 디지털 지원사업 중에 일부고요. 특히 이 2개는 AIDT를 채택한 학교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정 위원** 디지털튜터는 제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 보려면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은 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디지털선도학교도 기본적으로 AIDT를 잘 활용하는 선도 학교들로 저희들이……

○**고민정 위원**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처음 출발할 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고민정 위원** 처음 출발은 그렇지가 않지요.

23년 8월부터 시작하셨지요? 350개 정도 학교로 시작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때는 또 AIDT가 아직 개발되기 전이라서 그랬을 것 같고요. 워낙 취지는……

○**고민정 위원** AIDT를 하겠다는 의지를 교육부가 그때는 가지고는 있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지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디지털선도학교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디지털선도학교는 그야말로 디지털전환을 선도하는 학교고요. 중요한 툴이 AIDT이기 때문에 디지털선도학교가 AIDT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목적에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장관님, 디지털선도학교가 애초에 23년에는 351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셨고요. 예산 지원 계속했고, 24년에도 예산 지원했고 현재는 한 1000개 정도가 됐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선도학교를 처음에 시작한 것은 AIDT라는 이것을 활용하려면 기반이 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교를 사업으로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이 디지털선도학교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지금 원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디지털선도학교는 학교대로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

립니다만 AIDT라는가 이런 새로운 기술은 가능하면 공정한, 공평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학교가 하는 게 좋지요.

○**고민정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교육부가 지금 전 학교에 다 실시하려고 했지만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선정된 곳들만 할 수 있게끔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자율적으로 선정한 곳만 하기로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기왕 하실 거면 디지털선도학교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그 학교들은 이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인 거고요.

○**고민정 위원** 아니지요. 전체가 다 하지 않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아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할 겁니다.

○**고민정 위원** 정확하게 퍼센트 누구 아시는 분, 실무자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송 국장이 좀 말씀하시지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입니다.

저희가 학교 가배정을 작년에 하고요. 지금 아직 기본계획을 통해서……

○**고민정 위원** 학운위에서 디지털선도학교 다 결정했습니까?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아니, 디지털선도학교에 대한 결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단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을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학교가…… 3월 이제 1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대부분의 운영위에서는, 학운위에서 다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교과서 채택……

○**고민정 위원** 그러면 디지털선도학교 중에서 이 AIDT를 선정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비율을 알고 계시냐고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아직 저희가 디지털선도학교를……

○**고민정 위원** 아직은 모른다?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예,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장관님, 그러면 디지털선도학교를 처음에 만드실 때는 아까 장관님 답변처럼 AIDT가 아직 개발되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이걸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AIDT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디지털선도학교에 예산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AIDT…… 그런데 다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위원** 아니,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제가 그 숫자까지 여쭙지는 않겠는데, 장관은 불이익 조치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6개의 교육청에서 벌써 이렇게 예산 삭감을 통

해서 불이익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아마 AIDT를……

○**고민정 위원** 얼마 되지 않는 거라면 다시 원복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자율 선택입니다만 선도학교들은 가급적이면 다 선택하도록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장관님, 지금 디지털선도학교 얼마큼 선정했는지도 파악도 안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100%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만, 지금 아마 국장이 숫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위낙 취지가 AIDT를 활용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채택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장관님, 오늘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혹시라도 선택을 안 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낙 이 학교들은 중점 지원을 하기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만큼……

○**고민정 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호** 추가질의 안 하시면 1분 더 드릴게요.

추가질의 안 하실래요?

○**고민정 위원** 예,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요, 일단 현황 파악을 먼저 한번 해 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AIDT를 선택하느냐와 상관없이 디지털선도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계속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취지를 저희가 잘 이해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고. 그러면 디지털선도학교 중에서 이것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27일 정도면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그거 파악이 됐습니다.

○**고민정 위원** 파악된 거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제보받은 걸로 의하면 몇몇 학교들에서는 학운위에서 선정을 했다가 취소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PPT를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거는 학교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선정을 취소한 사유가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자료 수준이다’, ‘출판사가 불법적이고 집중력 저하와 현장 준비가 부족하다’, ‘생성형 AI 기술 수준이 낮다’, ‘기존에 사용 중인 디지털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저희가 문제 지적했던 것들을 학교의 학운위에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취소를 한 거라는 얘기를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또 그 지적에 따라서 지금 자율 선택을 한 것인 만큼 선택하지 않은 학교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장관님, 이미 저희가 말씀은 드려 놨는데 선택했다가 취소한 학교들이 어디어디가 몇 개나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보충질의 5분 드렸고요.

만약에 추가질의 없으시면 1분 더 드리는 걸로 하고 1분 더 쓰시면 이제 더 이상 질의는 저희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시간 부족해서요.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계엄 열 번, 이번 윤석열 계엄까지 해서 열한 번의 계엄이 있었거든요. 최초의 계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최초의 대한민국 계엄? 자료 보시면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최초의 계엄 선포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 일원에 내려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리고 그 옆줄에 보면 ‘여순반란’이라고 아직 돼 있지요? 옆에 보면 저 빨간 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김문수 위원** 저거 고쳐야 되겠지요, ‘여순사건’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김문수 위원** 그렇게 하고 건국 후 아홉 차례가 아니라 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거. 윤석열 정부까지 하면 열한 차례고요. 이런 거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뒤에 보면 최초의 계엄은 바로 여순사건입니다. 제주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주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제주사건에 파견, 국민들을 사살하라고 군인들을 보내니까 군인들이 저항해 가지고 여순사건이 한 치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제주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런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좀 틀리게 돼 있는 거, 아까 외국에 역사왜곡된 거 찾아내겠다고 하는 거, 우리 것부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여순사건이 제일 먼저고 ‘반란’ 자 아직도 남아 있는 거 빼 주시고.

아까 중국 관련된 거는, 뭐 여담 겸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북공정 같은 역사왜곡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거 안 되니까요. 다만 경제적인 실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종합적으로…… 지금 중국의, 사실은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이제 경제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사는 철저히 하되 또 실리는 쟁기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꾸 뉴스에 ‘26년도는 제로 베이스’ 그래서 증원 되기 전 인원으로 가는 걸로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저희가 이제 KMC라고 의대 학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의대 학장님들께서 3058명을 건의를 해 주셨고요.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의정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2월 달, 곧 3월 되는데 타결이 아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대교육지원국이 지금 신설이 됐기 때문에 국의 직원들이 전체가 다 매달려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대 증원 관련해서 잘 해결돼야 되겠고 참 이게 잘 해결되면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의대가 충분한 곳에는 좀 줄이고 전남처럼 아예 없는 곳은 꼭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다음에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는 23년도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4000억입니다, 4000억. 성균관대 3500억, 고려대 3400억. 이렇게 많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등록금 인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부 지원도 받으면서 이렇게 등록금 인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반면에 포스텍, 한국기술교육대, 조선대학교는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이렇게 인상 많이 하는데 재정지원도 이렇게 겹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금 인상 많이 하는 데는 재정지원을 줄여야 됩니다. 반대로 등록금 올리지 않는 대학교는 재정지원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따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국립대 같은 경우도 대체로 5% 이상 넘기는 게……

1분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도 국립대, 주로 교대입니다. 9개 교대 24년도 171억, 25년도에 186억. 정부 지원도 받고 등록금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 지원을 줄여야 되고 등록금 안 올린 데다가 정부 지원을 높여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주장은 드리고.

그다음에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쓰고 있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문수 위원 그런데 지금 27곳 대학교 총장님들한테 질문을 해 봤더니, 그러니까 교직원이라든가 외부 인사로만 지금 사무국장을 쓰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처럼 일반직 공무원 여기도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총장이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문을 좀 열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등록금하고 재정지원 문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무국장 문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등록금 부분은 저희가 위낙,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이라고 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은 Ⅱ유형의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못 받게 돼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 해에는 등록금을 물가 수준의 1.5배까지 올리는 그 제한을 다 채울 경우에는 장학금 Ⅱ유형의 혜택을 못 받더라도 그쪽이 더 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교육위에서 법안이 법안소위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법안과 좀 상응해서 저희가, 또 위원님 지적하신 등록금 인상하는 대학에 좀 더, 인상을 하지 않는 대학에 정부가 보완적으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의원실과도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저희가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를 상당히 근본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정부가 1명씩 주요 국립대학에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이 파견이 됐었는데 그걸 다 없애고 자율적인 사무국장 채용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도입해서 사무국장을 교육부 출신 일반직들도 좀 추가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이신데 지금 위낙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제도 도입 성과도 좀 평가를 해 보고 또 지금 보여 주신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업데이트된 그런 여론도 더 청취를 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의원실과 심도 있게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지난 2월 1일에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박물관 3~4층이 다 전소된 경우인데요. 보니까 다행히 유물 손실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관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문화유산 안전 실태 등을 한번

보러 갔었거든요. 봤는데……

(영상자료를 보면)

허동현 위원장님, 화면 봐 주시면, 다른 분들도 한번 봐 주시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보 조선방역지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실 현장 방문 당시 사료관 지하서고에서 보존 처리 중인 독립운동가 인물 카드도 확인했습니다. 직접 찍은 화면 속 인물 카드는 강화군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한 임두엽 선생님의 인물 카드입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열망과 희생의 기록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뿌듯했는데요. 이를 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애절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독립운동 연구 및 역사적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화재 등 안전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조금 미진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점검 업체는 2006년도에 설치된 화재수신기의 동작감지 자연 문제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기계 교체를 권고했어요. 2006년도에 설치된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 사항을 빼고 4년 동안 소방청에 신고할 때 점검 결과를 ‘양호’라고 기록하여 제출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쑥 빼고 했더라고요.

위원장님, 화재수신기의 심각한 노후화와 감지 자연 문제로 인해서 교체 권고 사실을 조직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은폐까지는 아니지만 은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보고받으셨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이렇게 중요한 문화유산을 갖다가 사료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을호 위원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 보니까 화재 상황에 무방비로 당할 뻔했고요. 화재가 발생 안 해서 다행이지 혹시라도 났다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소중한 유산들이 소실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체하지 못한 이유를 저희가 실무자한테 여쭤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교체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방청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 중요한 감지기를 못 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허 위원장님,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지금 석면 교체가 돼야지 그 화재……

○정을호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석면 교체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제가 24년 5월에 취임을 했고요.

○정을호 위원 그 전에 보고는 안 받으셨고?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최근에 제가 석면 교체 문제가, 위원장실은 위에 벽이 다 교체가 됐는데……

○정을호 위원 석면 교체는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화재수신기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을호 위원** 이따가 부탁드릴게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알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장관님, 보신 바와 같이 교육부 소속기관에서 방재시설 교체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4년 동안 방치하고 또 염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 소속기관에 조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방청의 화재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장관님, 장관님도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잘 청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서 장관님, 좀 방재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전부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은 끝나고 나중에 좀 받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알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 한 가지, 아까 장학금 관련해서 김문수 위원님도 질의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화면 보시면, 등록금 영수증이거든요. 이번 등록금 영수증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에게 최근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지난해보다 5% 이상,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금 인상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다가서는 거는 월세, 식비, 기타 생활비가 많이 상승했다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대학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지금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다 올리고 있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현안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학생 1인당 55만 원씩 지원받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 장학금을. II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할 수 없어서 35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혜택 못 받는 부분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기존에 낸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교내 장학금 편성 상황을 지켜보겠다 말씀하셨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언론보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금 인상분으로 자체 장학금을 확충해 보전하겠다 말만 해 놓고 구체적인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학들의 그런 부분, 안일한 부분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요구드린 것처럼 각 대학들이 제출한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자체 장학금 확충이나 교육 투자 확대 관련된 내용을 세밀하게 해서 저희 의원실과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존경하는 정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차관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저희가 등록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대학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번에 등록금 인상된 내역을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인상 내역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저희가 지금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사해서 대학별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도개선 방안이나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그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을호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공감합니다.

○**정을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야기……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을호 위원** 예.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사실은 저희가 소방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데요 2개월 내로 못 하면 이게 행정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두 지시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은폐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석면 교체가 돼야지만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 그러니까 화재 그걸 교체하지 못한 것은 2020년에 국정감사에서 사료관 서고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하라는 또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도 사료를 보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설비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신 교체를 진행했고, 지금 26년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엔 꼭 고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 중요한 것은 화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다 중요하지만 불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지금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게 이삼 초 지연돼서 경보가 울리는 하자인 겁니다. 그래서……

○**정을호 위원** 이삼 초 지연이라고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삼사 초인가 이삼 초인가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것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론가스라고 자동진압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그리고 오셔서 조사한…… 사실은 사료를 보존할 때 중성지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전문적인 건 나중에 하시고요.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예.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이주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 1월 31일 ‘2025학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검인정 AI 디지털교과서를 자율 선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자율 선정으로 안내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자율 선정이라는 게 핵심인데요. 그 이후에 AIDT 도입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모든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공문 내려보냈는지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들과 달리 유독 대구만 자율 선정이라는 부분을 빼고 ‘AIDT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으니 이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교육부의 안내 사항과는 사실상 정반대의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관님, 지난 현안질의 때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18일에 ‘대구교육청 AIDT 강제 채택 공문, 교육부의 학교 자율 선정 방침이랑 달라서 이것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았을 때 장관님이 ‘대구교육감은 다 선정하는 걸 독려하는 거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율 선정 계획에 기반해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되 자율권은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장관님,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요 교육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월 17일 기준으로 대구의 모든 학교 100%, 모든 학교가 AIDT를 선정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최근 업데이트한 결과는 458개로 나와서 100%는 아니고 98%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98%, 저희 의원실에 주실 때는 100%였는데 이제 98%……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래도 98%라는 비율이 어마어마한 비율이지요, 자율 선정인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백승아 위원** 자, 이게 2월 17일 자료인데요. 제가 18일 현안질의 때 질의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님은 모든 학교가 AIDT 택했다는 걸, 대구의 모든 학교가 택했다는 걸 모르셨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이건 17일 자료고 제가 질의한 것은 18일이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백승아 위원** 그런데 장관님이 상임위장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학교의 자율 선택을 존중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98% 이게 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한 결과로 보이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감님께서 워낙 AI 디지털교과서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이제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개별 학교들이 채택을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백승아 위원** 아니요, 개별 학교 말고 강은희 교육감이 공문에 자율 선정이라는 내용을 뺏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98%가 선택을 했잖아요. 이게 자율적 권한을 인정한 결과로 보이시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도 그 과정은 결국 개별 학교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아니, 자율 선정이라는 말 뺏잖아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백승아 위원** 지금은 판단이 안 되세요? 자율 선정이라는 말 빼 가지고 98%가 나왔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주신 취지는 정말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교육정책을 저희가 최근에는 교육감님들과의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교육부의 자율 선정 취지를……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본인이 해석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게 자율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백승아 위원** 지금 강제 채택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교육부 방침과 상반된 대구교육청 공문이 규정상 문제가 없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점검해 보신다고 했는데 점검해 보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혹시 담당 국장이 좀 말씀해 보시지요.

○**백승아 위원** 지난 현안질의 때 점검해 보신다 그랬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저희가 실무선에서 학교의 담당자들하고 수시로 단텔을 주고받고하면서……

○**백승아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 가지고.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예. 학교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자율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자율로 선정했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예.

○**백승아 위원** 공문은 자율 선정이 아닌데 자율 선정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됐다,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자율 선정이라는 말을 빼고 내려보냈는데 현장에 사실을 확인해 보니 자율 선정을 하고 있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교육청의 방침을 이렇게 시·도교육청이 무시해도 되는지. 사실상 장관님이 강제 선택하도록 방임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국회와 협의해서 자율 선택을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든……

○**백승아 위원** 장관님, 교과용도서에 대한 규정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 누가 선정하도록 돼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학운위에서 결정해서……

○**백승아 위원** 학교의 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학교의 장이 마지막에……

○**백승아 위원** 규정 사항 외에 교과용도서에 필요한 세부 사항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도

록 되어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요.

○**백승아 위원** 그런데 교육부장관님이 학교에 자율 선택하라고 했고, 그렇다면 누가 선택해야 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학교장이……

○**백승아 위원** 학교장이 선택해야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사실상 교육감이 규정에 어긋나는 개입을 해서 교과서 사용을 강제한 거예요, 강제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그……

○**백승아 위원** 교육청이 모르는 척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요. 규정 위반 여부와 대구 교육청에서 공문에 강제 채택하도록 한 정황 있는지 제대로 명확하게 확인하고 감사를 하시든지 확인을 하시든지 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백승아 위원** 지금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공문에 분명히 자율 선정이라는 말을 빼고 내려보내서 98%의 채택률이 나왔는데 현장을 알아보니까 자율 선정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자율 선정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신 건지 근거 자료 보내 주세요, 저희 의원실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말로는 맨날 다 하겠다고 하시는데 안 주시니까……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면 좀 이따 하시고요.

○**백승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안 하실 거면 1분 더 써도 돼요.

○**백승아 위원** 1분이요? 그런데 지금 다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안 하는 거지요?

○**백승아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백승아 위원** 자료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를 듣고 대구교육청이 국회를 속일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국회를 속일 수 있다. 다만 교육부가 국회를 속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어찌 됐든 대구가 98%가 나오면 이것은 전 국민이나 교육부도 합

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되니 대구교육청에 대해서 좀 특별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야지 대구교육청의 98%를 지금 두둔하고 있는 교육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이 탄핵 국면 속에서 진짜 교육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것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니, 자율성을 줬는데 어떻게 98%, 100%가 채택이 되지요? 그거 합리적인 의심이 안드세요? 예?

아니, 대구교육청이야 우리 국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교육감의 의지대로 강행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교육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뭐……

○**위원장 김영호** 어떻게 98%, 100%를 자율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게 상식적인 답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만 또 저희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존중을 해 드리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존중은 또 다른 문제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들이 다 같이 보는데 어떤 국민이 AI 디지털교과서, 특히 다른 수도권은 10%, 20%밖에 안 되는데 대구만 98%, 100% 나오면 국민들도 ‘대구의 강은희 교육감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였구나. 약간 강제성을 띠었구나’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분명히 자율권을 부여했는데 대구만 이렇게 유독 높은 점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대국민 립 서비스는 그래도 해 주셔야 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두둔하고 변론해 주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요, 두둔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청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교육부가 조작하고 공문서 위조해도 다 존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제가 조사도 해 보겠다고 했고 요청하신 자료도 드리겠다고 했고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서고요.

하여튼 대구교육청의 98% 자율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율권을 줬는데 98% 채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국민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질의 전에 과거 이야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1954년 1월에 부산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부산세관 창고가 불이 났어요. 부산세관 창고 안에 어떤 유물이 있었느냐? 조선왕조 국왕들의 어진이 다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내려가서 부산세관 창고에 보관했는데 불이 나서, 허동현 위원장님은 아시겠지만 철종 어진하고 효명세자 어진 겨우 두 점 구했습니다. 조선시대 국왕들은 10년에 한 번

씩 초상을 그리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어진이 화재로 다 소실이 된 거지요. 역사가 사라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정을호 위원님께서 국사편찬위원회에 화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정말 대단히…… 서울대학교 규장각 자료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화재 방지 예산을 돈이 없어서 못 세운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님한테 광화문에 있는 독도홍보관 냉난방을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부자 나라 8위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부가 1년 예산이 104조 원인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냉난방기 설치할 예산이 없다, 이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너무 따가운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쟁기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장관님, 교육부에 장관님이 집행하실 수 있는 풀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1년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총예산은 100조가 넘습니다만 가용 예산은 또 좀 다릅니다.

○**김준혁 위원** 그래서 장관님, 부탁드리는 건데요. 전에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이런 질의 자체가 무슨 교육부나 기관들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장관님, 차관님, 여기 지금 많은 고위 간부님들 계시는데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화재 방지 시스템과…… 광화문에 가서 작년에 난로 2개 있는 것 보고 정말 내가 눈물이 나왔는데 그것 예산 올해 안에 할 수 있게 제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꼭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김준혁 위원** 박지향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 관련된 내용 또 사도광산 관련된 연구 이런 것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생체실험과 관련된, 우리 조선인 생체실험을 당한 분들에 대한 그런 연구 같은 게 좀 있었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죄송합니다만 저희 재단 차원에서는 그런 연구는 안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2월 16일, 얼마 전이지요. 2월 16일 날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신 지 80년 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체실험과 관련돼서……

왜 그러냐 하면 동북아역사재단이 원폭 피해와 관련된 것도 연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폭피해자후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같이 다

녀왔어요. 장생탄광 같이 가서 현장에 있다 왔는데, 원폭 피해도 조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마루타 실험 대상이 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중에 한 분이 윤동주 시인인데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기관 단 한 곳도 이것을 연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이 내용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내년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셔서 연구자들도 확보를 하시고, 아니면 학술대회도 개최하시고 해서 이걸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일제의 만행을 증명하는 것이 강제 동원과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원폭 피해 내용뿐만이 아니라 생체실험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그것 하시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김준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분만 더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준혁 위원** 발해 역사 연구와 관련해서 발해 연구를, 제가 발해 연구자들하고도 오랫동안 쭉 교류를 해 왔는데 이분들이 주로 중국 쪽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발해 관련된 유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부터 그 일대를 쭉 다녔는데 발해 유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발해 관련 유적 박물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직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지금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때 연구자로서 이사장님처럼 어디 기관장이 되면 내가 꼭 이것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번에 발해 연구와 관련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관련된 것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한일 교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통신사 사행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조선왕조실록 보면 나오는데 막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부의 장이 죽었거나 아니면 장자가 죽었거나 했을 때 그때 비공식 사행단이 가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다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개인이 연구할 수 없다면 동북아역사재단 그 과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고,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장관님, 드디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로 확정됐어요. 정말 오래 끌

었어요. 22년도 연초에 예비조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2025년도 2월이니까 꼬박 만 3년 걸렸어요. 그런데 숙명여대에 좀 안타까운 지점이 표절률을 발표를 안 했어요. 표절률을 발표를 안 했는데 저희가 언론을 보거나 기존에, 예전에 표절 검수에 참여했던 교수님들 얘기를 보면 대략 42~45%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저희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표절 확정은 났는데 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이것에 대한 징계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징계 절차에서 가령 철회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학위가 취소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수정의견이 나오거나 징계 절차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고 또 숙명여대 쪽하고 좀 얘기를 해 보면서, 연진위에 있는 내부 일부 위원들이 ‘이게 관행적이었다. 미술과 관련한 논문에서는 그랬다’ 그리고 ‘각주를 안다는 것도 늘 뭐 있어 왔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어렵게 얻어 낸 연구진실성에 대한 결과물 도출인데 이것이 마치, 다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밟았을 때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뭔지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학위 논문의 표절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학의 권한을 가지고 할 사안이라는 것을 여러 번 국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자체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아마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존중을 하는 것이, 대학의 자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부가,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교육부는 그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100% 인지하고요. 다만 국회라는 기능이 교육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감시의 기능을 사학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이 문제는 저희가 끝까지,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과가 날 때까지 저희가 지켜볼 거고요.

잠깐만 시간 스톱해 주시고.

장신 출판문화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쪽은 안 보여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아, 예.

○**문정복 위원** 지금 회의록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위원회 회의록인데, 모여서 회의하신 건 아니고 서면회의 하신 거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아니요, 제가 그때 해외 파견 중이어서 저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장신 부장님은 서면으로 하고 이분들은 회의에 직접 참여하시고……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정확

하진 않습니다.

○문정복 위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마르크스주의적 직선적 발전사관에 토대를 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한국 고유의 특성과 보편적 발전 패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저자 나름의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주요 특징들을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서술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이 책에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면에 보면 ‘출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신 부장님께서 내재적 발전론이 뭔지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내재적 발전론은 1960년대부터 한국 사학계에서 제기된 이론인데요. 원래 식민사관에서 조선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항해서 한국도 조선시대부터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 기본적 체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학문입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님은 분명히, 이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다수의 문장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질서를 폄훼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분은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답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회의록이 나왔다라고 하면……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영호 예.

○문정복 위원 나왔다라고 하면 출판문화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장신 부장님은 이분과 더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얘기를 해서 어떤 단락이 문제가 됐느냐, 어떤 단락이 그렇게 느껴졌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일부 저자와 수정을 해서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국 역사 및 경제에 관심 있는 영어권 전공자, 학생들 및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게 국내용이 아니잖아요. 국내에 있는 일반 독자들은 이것이 갖고 있는 양비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구분해 가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특히 학생들은 이 영어책만, 이 책만 보면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위원님의 말씀 깊이 새기고요. 아마 저희가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정복 위원 저는 단순히 단어 몇 줄, 글 몇 줄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의 전반적인……

그리고 이 저자도 보니까 서울대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 갔다 오고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면서 이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는 작가인 거예요. 그런 작가의 책을 더군다나 국가의 예산으로 번역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홍보하는 거라면 이번에 이 문제는 장신 부장님, 특히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의 잘못이 적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통렬한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문화부장 장신 예, 알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여사님 논문,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1대 국회 간사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좀 해 왔고 어저께서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정말 3년 만에 석사 논문의 표절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는데요. 문정복 간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평균 120일이면 밝힐 수 있는 논문 검증 작업을 약 3년 동안 끌었다는 겁니다. 이 3년 과정 속에서 숙명여대와 국민대학교는 국민들을 조롱해 왔던 거고요 모든 대한민국의 학자들의 명예와 그리고 윤리의식을 완전히 훼손시킨 일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또 숙대가 숙대·국민대 동문들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숙대·국민대가 왜 이렇게 3년 동안 지연시키고 이 문제를 은폐했는지 국민들에게 대국민 양심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숙대나 국민대학교가 이 실체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겠다 그리고 관련자들 중인 채택해서 모두들 국회로 소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 안 계시면 야당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1분씩 다 쓰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들어와 있네요.

오늘 서면질의는 김문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고 정부 측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해 주시고 그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쭉 이어진 우리 상임위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교육부장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출장 위원(2인)

강경숙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 오석환

차관보 김영곤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

대변인 구연희

감사관 김도완

사회정책협력관 정병익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의대교육지원관직무대리 김홍순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낙년

기획처장 이강한

출판문화부장 장신